

진보 시민단체 "모스 탄 즉각 체포...출국 전 신병 확보해야"

등록 2026.06.02 16:32:12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진보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모스 탄 (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체포를 촉구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짓을 유포 하며 국내 극우세력을 선동하는 범죄자 모스 탄이 또다시 한국에 왔다"며 "경찰은 모스 탄을 즉각 체포하고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탄 교수를 중심으로 국내 극우세력이 조직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모스 탄이 한국에 오자 국내 극우세력은 '한-미부정선거공동조사단(조사단)'을 발족하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까지 개설하여 조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모스 탄이 대놓고 한국법을 위반하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서 탄 교수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기도 평택시의 사전투표소를 방문한 점도 꼬집었다.

이 단체는 "경찰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범죄자 모스 탄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며 "(탄 교수는) 이를 거부하고 사전 투표소를 방문, 황교안과 전광훈, 전한길을 연달아 만나 국내 극우세력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탄 교수 출국 예정일인 오는 4일을 언급하며 "시간이 많지 않다. 미국에 있을 때는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면, 범죄자가 제 발로 다시 들어왔는데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재차 촉구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고발됐다.

앞서 경찰은 전날(1일)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탄 교수도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